

## ‘적폐청산’…국정원 댓글 · 특활비 정치개입 등 수사

### ■ 댓글 등 정치공작 MB국정원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비롯한 광범위한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반년 이상 이어진 수사를 통해 2012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매우 광범위한 불법 정치 개입 공작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과거 그릇된 정치 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자체적으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박원순 제압 문건 등 13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국정원이 2017년 8월 21일 가장 먼저 ‘댓글 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팀장 김 모 씨 등 30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 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주축으로 파견 검사까지 포함, 2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정규 직원인 심리전단 요원들을 동원한 여론 조작 외에도 민간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욱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수뇌부와 민간인 팀장 등 30명이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2월 부임한 원 전 원장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나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해 비판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면서 직접 사이버 외곽팀을 편성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점조직 형태로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주요 현안 별로 특정 사이트의 여론 점유율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등

조직 운영 실적을 점검하며 활동비를 지급했다. ‘민간인 댓글 부대’에 당시 국정원이 들인 예산은 총 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울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한 연예인 등 문화인들을 ‘퇴출’시키려는 공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2009년 기초실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을 상대로 압박 활동에 나섰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도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유도했다.

국정원은 방송사와 광고주에게 압력을 넣어 퇴출 대상 연예인들의 ‘밥줄’을 끊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해 공작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연예인들의 이미지 실추를 위한 ‘특수 공작’ 차원에서 2011년 11월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모습이 담긴 합성 나체 사진을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가 하면, 허위로 한 방송인의 프로포폴 투약설 유포를 계획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MBC 등 공영방송 장악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0~2013년 MBC 사장이던 김재철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자사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2018년 1월 7일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대한민국어머미연합 등 보수단체들을 앞세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 공작과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당시 일부 여당 정치인들까지도 무차별 공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보수단체 대표 A 씨와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까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8월 한 보수단체가 국립현충원 앞에서 벌인 ‘DJ 부관참시’ 퍼포먼스도 당시 국정원의 사수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추명호·박원동 전 국익전략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대거 구속기소 했다.

###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 외에도 이른바 ‘적폐청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발탁한 이후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수사로 적폐청산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수사 결과 5천 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하성용 전 KAI 대표를 포함해 10명의 전·현직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들도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 ‘블랙리스트’와 쌍둥이 꼴을 이루는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불법지원)’ 및 관제데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3년간 보수단체에 69억여 원의 자금이 지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부 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 농단과 관련해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뒤 직무유기 혐의로 만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포착해 구속한 뒤 추 기소했다.

시위 도중 경찰 살수차에 희생됐으나, 박근혜 정부 내내 책임 규명이 이뤄졌던 고(故) 백남기 씨 사망 사건도 국가 공권 력의 남용에 의한 사건이라는 결론과 함께 700일 만에 종결 됐다.

적폐청산 수사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단연 국가 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의혹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0 월 31일 검찰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격 체포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 올랐다. 2개월여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된 이 수사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직 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 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 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상납된 국정원 자금은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매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 리·수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6천500만원), 이재 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 금(9억7천만원) 등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일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 씨가 운영하 던 의상실에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 혐의가 추가됐고,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 리고도 구속을 면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을 이끈 세 명의 국정원 장 중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도 구속기소 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 부의 '실세'로 불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별도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구속기소 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부수석실이 국가정보원 돈으로 '진박(진실한 친 박)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한 사실도 발각돼 현기환 전 정부수석과 후임 정부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 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 사드 배치와 中 보복... 한중 갈등과 봉합

### ■ 개요

2017년 한중 관계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극에서 극으로 갔다. 2016 년 초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에 착수하 면서 시작된 한중 간 사드 배치 갈등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적·질적으로 지속 발전해 온 한중 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도 록 만든 계기가 됐다.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사드 보복이 지속되면 서 양국 관계는 점점 악화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 한국으 로서는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였던 사드 갈등은 약 20개 월 만인 2017년 10월 양국 외교부 협의 발표와 함께 극적으로 풀렸다.

### ■ 한중 갈등 속 사드 배치 강행...중국 보복 심화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어진 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공식 협의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한미 양국의 '사드 공식 협의' 발표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북한 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자 우리 정부는 2016년 7월 8일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발표했다.

그동안 강력히 반발해 오던 중국이 자국에 진출해 있는 한 국 기업에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중국의 보복이 문화에서 경제 영역으로 확산하는 동안 한미 양국도 부지 선정에 이어 반입 절차를 속속 진행하는 등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와중에도 사드 배치 관련 작업이 진행됐다.

2월 28일 국방부는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 다. 3월 1일에는 한민군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 방부 장관의 전화 대담에서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 추진'에 합의했다. 같은 달 6일에는 미군 C-17 수송기를 통해 사드 발 사대 2기가 오산기지에 도착한 데 이어,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4월 26일 사드 기지 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전격 반입 됐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 사이의 갈 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사드 장 비 반입 직전인 2017년 3월에는 중 국 국가여유국이 자국 여행사에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를 내 리기도 했다.

###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흐름도

